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1.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제외 .....         | 5  |
| 2. 온라인 영업에 대한 영업규제 적용 배제 ..... | 9  |
| 3.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 .....         | 13 |
| 4.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 .....  | 17 |
| 5. 규제 일몰기한 세분화 .....           | 21 |
| ※ 참고자료 .....                   | 2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3.
3. 회부연월일 : 2026. 2.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안 제2조제4호다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안 제12조의2제1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안 제12조의2제2항)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라.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안 제12조의2제2항)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 의견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연장(안 제48조의2)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별 일몰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SSM(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까지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공정 경쟁을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범위에서 제외

#### ○ 온라인 영업에 대한 영업규제 적용 배제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 배제

#### ○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

- 기존 영업시간 제한(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10시 범위 내 영업시간 제한 명령 가능) 규정 삭제

#### ○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

-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삭제
-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 지정시 해당 지역주민·협의회 의견 청취

#### ○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신설

-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하에서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1.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제외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제외하는 내용임(안 제2조제4호다목).

###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br>-----<br>-----.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u>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u> 형태로 운영하는 <u>점포</u> | 다. -----<br>-----<br><u>-체인사업의-----점포 중 직영점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u> |
| 5. ~ 16. (생략)                                                                                    | 5. ~ 16. (현행과 같음)                                                                               |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준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 3,000m<sup>2</sup> 미만 점포 중 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또는 그 계열회사)나 ② 대기업의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또는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sup>1)</sup>의 형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

준대규모점포에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체인본부가 개별 점포의 상호, 판매방법, 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확대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그러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경우에도 해당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 유통기업인 경우에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인점포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하여 프랜차이

---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 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즈형 체인점포 및 체인본부와 「가맹사업진흥법」상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프랜차이즈 체인점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규제로 인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사업자”는 구별되는 용어이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상을 “가맹본부”를 포함하는 개념인 “가맹사업자”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2)</sup>.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준대규모점포 가맹 방식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사업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준대규모점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당시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제한 대상임을 인지하고 이득 및 손해를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므로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한국수퍼마켓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매년 1,2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폐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영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대상이나, 경쟁 유통채널(온라인유통, 편의점, 식자재마트 등)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2. 온라인 영업에 대한 영업규제 적용 배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u>영업시간의 제한</u>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u>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u>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u>제한</u> 등)<br>① -----<br>-----<br>-----<br>-----<br>-----<br>-----<br><u>의무휴업일을</u><br>-----.<br>-----<br>-----<br>-----<br>--- <u>대규모점포등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u> -----. |
| 1. <u>영업시간 제한</u>                                                                                                                                                                                                                                                                                                                                                           | <삭 제>                                                                                                                                                                                                                                                    |
| 2. <u>의무휴업일 지정</u>                                                                                                                                                                                                                                                                                                                                                          | <삭 제>                                                                                                                                                                                                                                                    |

현행법상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행위도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법제처의 법령 해석<sup>3)</sup> 이후 실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범위는 온라인배송 영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업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만 온라인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실제로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는 폭발적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의 유통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참고자료),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간 차등적인 규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1인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대, 소비자의 생활 패턴 다

3) 주: 영업시간 제한 중 및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영업이 아닌 온라인배송 영업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12년 법제처 법령 해석 이후 실무상 온라인배송 영업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12-0517):**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양화 등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상품을 배송받고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새벽배송이 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정주 여건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평일 새벽배송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배제 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허용 문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sup>4)</sup> 등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 찬성 논거                                                                                                                                                                                                                                                             | 반대 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벌이·1인가구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li> <li>○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li> <li>○지역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li> <li>○온라인 소비 확산 등 변화된 유통환경 반영 필요</li> <li>○배송경쟁 촉진으로 가격·서비스 개선</li> <li>○물류·배송·IT분야 관련 분야 고용 창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감소</li> <li>○대기업 중심 유통시장 재편 심화</li> <li>○지역 기반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li> <li>○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업·영업제한 취지 훼손</li> <li>○심야배송 노동으로 근로자 건강권 악화</li> <li>○과도한 배송 출혈 경쟁</li> <li>○포장재·심야 운행 증가 등 환경 부담</li> </ul> |

4)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성명서]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중단 촉구, 26.2.6.

현행 규제와 온라인 업계의 성장·오프라인 업계의 침체 결과와의 인과성,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온라인 플랫폼·대형마트·소상공인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상생 방안 등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유사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를 통하여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별 주요 내용 비교

|          | 최수진의원안<br>(제2201014호) | 이종배의원안<br>(제2201730호) | 강승규의원안<br>(제2204513호) | 개정안<br>(제2216537호)            | 김동아의원안<br>(제2216611호) |
|----------|-----------------------|-----------------------|-----------------------|-------------------------------|-----------------------|
| 대상       | 대형마트                  | 대형마트<br>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br>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br>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br>준대규모점포        |
| 허용<br>범위 | 의무휴업일<br>영업시간제한       | 의무휴업일<br>영업시간제한       | 의무휴업일<br>영업시간제한       | 의무휴업일<br>영업시간제한 <sup>5)</sup> | 의무휴업일<br>영업시간제한       |
| 허용<br>거래 |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br>통신판매         |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br>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
| 조항<br>구성 | 제5항 신설                | 제1항 단서<br>추가          | 제5항 신설                | 제1항 단서<br>추가                  | 제5항 신설                |
| 시행일      | 공포 후<br>6개월           | 공포 후<br>1개월           | 공포 후<br>6개월           | 공포 후<br>6개월                   | 공포 후<br>즉시            |

5) 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537호)」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무휴업일이 아닌 평일에 오전 0~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시간대에 온라인배송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3.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무휴업일 중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임(안 제12조의2 및  
제52조제1항 등)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br>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제한 등)<br>① -----<br>-----<br>-----<br>-----<br>-----<br>-----<br><u>의무휴업일을</u><br>-----.<br>-----<br>-----<br>-----<br>-----<br>-----<br>--- <u>대규모점포등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u> -----.<br><u>&lt;삭 제&gt;</u><br><u>&lt;삭 제&gt;</u> |
| 1. 영업시간 제한<br>2. 의무휴업일 지정                                                                                                                                                                                                                                                                                                                                  |                                                                                                                                                                                                                                                                                                                |
|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3조의4(영업정지) -----<br>-----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 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 2.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  
업 명령을 위반한 자

[illegible]

1. 제12조의2제1항에-----  
-----  
-----, <후단 삭제>

## 2.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

<삭 제>

<삭 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야·오전 오프라인 소비 수요의 일부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임.

이에 근거하여, 2025년 2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229개 중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하는 곳은 162개이며, 이 중 112개 기초지자체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현황('25.2.)

| 구분             | 기초<br>지자체 수 | 출점               |              |                           | 미출점 |
|----------------|-------------|------------------|--------------|---------------------------|-----|
|                |             | 오전0시~10시<br>영업제한 | 기타시간<br>영업제한 | 미시행                       |     |
| 1. 서울          | 25          | 23               | 2            |                           |     |
| 2. 부산          | 16          | 4                | 12           |                           |     |
| 3. 대구          | 9           | 3                | 5            |                           | 1   |
| 4. 인천          | 10          | 4                | 4            |                           | 2   |
| 5. 광주          | 5           | 5                |              |                           |     |
| 6. 대전          | 5           | 4                |              | 1 (유성구)                   |     |
| 7. 울산          | 5           | 4                |              | 1 (울주군)                   |     |
| 8. 경기          | 31          | 21               | 6            | 4 (여주시, 과천시,<br>연천군, 양주시) |     |
| 9. 강원          | 18          | 5                | 5            | 1 (영월군)                   | 7   |
| 10. 충북         | 11          | 5                | 0            | 1 (충주시)                   | 5   |
| 11. 충남         | 15          | 7                | 2            | 1 (서산시)                   | 5   |
| 12. 전북         | 14          | 7                | 1            |                           | 6   |
| 13. 전남         | 22          | 5                | 2            | 1 (영암군)                   | 14  |
| 14. 경북         | 22          | 6                | 4            | 4 (안동시, 문경시,<br>경산시, 성주군) | 8   |
| 15. 경남         | 18          | 8                | 5            |                           | 5   |
| 16. 제주         | 2           |                  | 2            |                           |     |
| 17. 세종         | 1           | 1                |              |                           |     |
| 합계             | 229         | 112              | 50           | 14                        | 53  |
| 시행(162개) 대비 비중 |             | 69%              | 31%          |                           |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최근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여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온라인 유통 업체가 오히려 수혜를 보는 한편, 맞벌이 가구 등 소비패턴의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근거와 위반시 영업정지 규정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주간에 대형마트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대형마트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된 이후 14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 폐지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이 확대되어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4.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

개정안은 매월 2회의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 수와 요일 지정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p> <p>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제한 등)</p> <p>① -----<br/>-----<br/>-----<br/>-----<br/>-----<br/>-----<br/><u>의무휴업일을</u><br/>-----,<br/>-----<br/>-----<br/>-----<br/>-----<br/>-----<br/><u>---대규모점포등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u>.</p> |
| <p>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lt;후단 신</p>                                                                                                                                                                                                                                                  | <p>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제한 등)</p> <p>② -----<br/><u>제1항에-----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 이내의-----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u></p>                                                                                                                                                                  |

|                                                                                                                                                                                                                                                                                                      |                                                                                                                                                                                                                |
|------------------------------------------------------------------------------------------------------------------------------------------------------------------------------------------------------------------------------------------------------------------------------------------------------|----------------------------------------------------------------------------------------------------------------------------------------------------------------------------------------------------------------|
| <p><u>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 <u>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 <p><u>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1. 의무휴업일 수</u></p> <p><u>2. 의무휴업일의 요일</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u>&lt;삭 제&gt;</u></p> |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매월 공휴일 이들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도록 하는데, 이는 오프라인 소비 수요의 일부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임.

이에 근거하여, 2025년 2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229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93개 기초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모두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있고, 57개는 평일에, 23개는 평일과 공휴일에 각각 1회씩 지정하고 있음.

###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현황('25.2.)

| 구분 | 기초지자체 수 | 출점 (176개)      |    |                      |                   |
|----|---------|----------------|----|----------------------|-------------------|
|    |         | 의무휴업 시행 (173개) |    |                      | 미시행 <sup>2)</sup> |
|    |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평일 <sup>1)</sup> |                   |
| 합계 | 229     | 93             | 57 | 23                   | 3 (울주·영암·연천)      |

주1) 월 2회 의무휴업 중 1회만 평일로 전환

주2) 준대규모점포만 출점하여 의무휴업 제도(지자체 선택사항)를 도입하지 아니함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최근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여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등의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sup>6)</sup>되면서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온라인 플랫폼·백화점·편의점·식자재마트 등과 달리 대형마트만 규제함으로써 업계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의무휴업일 수와 요일 지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과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일에 대형마트 쇼핑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지역별 유통환경에 맞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

6) 중앙일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국민 57만명은 폐지에 힘 실었다”, 22.8.1.

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된 이후 14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것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자율화할 시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5. 규제 일몰기한 세분화

개정안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세분화하여 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②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③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8조의2).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① -----<br>---제7조의5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8조의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36조제1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제1항·제4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제3항-----<br>----부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br>----- . <단서 삭제><br>② 제12조의2, 제13조의4 및 제52조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br>③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 <신설>                                                                                                                                                                                                          |                                                                                                                                                                                                                                                                                                                                                                                                                                                                    |
| <신설>                                                                                                                                                                                                          |                                                                                                                                                                                                                                                                                                                                                                                                                                                                    |

|                    |                                                                                                  |
|--------------------|--------------------------------------------------------------------------------------------------|
| <p>&lt;신 설&gt;</p> | <p>④ 정부는 <u>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u>의 <u>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
|--------------------|--------------------------------------------------------------------------------------------------|

현행법 제48조의2<sup>7)</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준대규모점포(SSM)에 관한 규제임.

이러한 규제는 대형마트 및 SSM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서 규제 존속기한 규정을 둔 취지는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동 제도는 최초 2010년에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마찰 가능성<sup>8)</sup> 등을 감안하여 일몰제의 형태로 입법되어 그 시효를 몇 차례

7)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p>&lt;제4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적용 대상 조문별 내용 요약&gt;</p>                                                                                                  |  |
|-----------------------------------------------------------------------------------------------------------------------------------------------------|--|
| ① 제2조제4호 : <u>준대규모점포의 정의</u>                                                                                                                        |  |
| ②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  |
| <p>: <u>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변경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진하다고 판단 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u></p> |  |
| ③ 제8조제3항·제4항                                                                                                                                        |  |
| <p>: <u>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u></p>                                         |  |
| ④ 제13조의3 : <u>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u>                                                                                                                      |  |

연장<sup>9)</sup>하였음.

개정안은 각 규제별로 존속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다소 수정하고 있는데,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존속기간이 짧아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규제는 존속기간이 길어지며,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는 존속기간이 없다가 존속기간을 가지는 규제로 변경되게 되는데,

|          | 존속 기한 만료 시점 |   |             |
|----------|-------------|---|-------------|
|          | 현행법         |   | 개정안         |
| 준대규모점포   | 2029.11.23. | → | 2027.12.31  |
| 의무휴업일    | -           |   | 2028.12.31  |
| 전통상업보존구역 | 2029.11.23. |   | 2029.12.31. |

전체적으로 규제의 타당성 주기가 짧아지고, 새롭게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급변하는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장기적인 경기부진과 임차료·인건비·대출금리 등 각종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악화가 높은 폐업률

8) 한-미, 한-EU FTA 등 체결시 유통업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0년 국회 논의 당시 통상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몰을 도입하고, 규제의 최초 존속기한은 3년(2010. 11. 24. 시행)으로 하였음

9) 2010년 최초 도입 → 2015년, 2020년 각각 5년 연장 → 2025년 4년 연장 → 2029년 11월 23일 만료 예정

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sup>10)</sup>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2025년 11월 20일자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의 일몰을 4년 연장한 점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이므로 추가적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의무휴업 유지를 전제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므로 관련 법안 논의시 연계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제한 규정의 존속기한 단축시 조기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58 |

10) “폐업 자영업자 98.6만명 역대 최대…2030 사장님 29만명 망했다” <서울경제, 2024. 12. 26.>

## 참고

온·오프라인 유통 통계(자료: 산업통상부)

### 1. 2020년~2025년 온·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동향

(단위 : 조원)

| 구분               |         | '20   | '21   | '22   | '23   | '24   | '25   | 연평균   |
|------------------|---------|-------|-------|-------|-------|-------|-------|-------|
| 온라인 등<br>(무점포소매) | 전체      | 104.6 | 118.8 | 124.2 | 131.4 | 137.7 | 142.7 | 6.4%  |
|                  | 주요 11사  | 73.9  | 92.1  | 101.5 | 107.4 | 121.0 | 135.3 | 12.8% |
| 대형마트             | 전체      | 33.8  | 34.6  | 34.8  | 36.7  | 37.1  | 36.4  | 1.5%  |
|                  | 주요 3사   | 25.0  | 24.3  | 22.4  | 21.5  | 20.9  | 20.0  | △4.4% |
| 편의점              |         | 26.5  | 28.4  | 31.2  | 31    | 31.7  | 31.6  | 3.6%  |
| 수퍼마켓<br>및 잡화점    | 전체      | 65.4  | 64    | 64.7  | 67.6  | 68.1  | 66.9  | 0.5%  |
|                  | SSM(4사) | 5.2   | 4.8   | 4.7   | 4.8   | 5.0   | 5.0   | △0.8% |
| 백화점              |         | 27.4  | 33.7  | 37.8  | 40.5  | 40.6  | 41.4  | 8.6%  |
| 전통시장             |         | 25.1  | 25.3  | 25.3  | 28.7  | 30.1  | -     | 4.6%  |

#### <참고> 온·오프라인 업태별 매출동향 출처

- ▶ 온라인·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백화점: 소매업태별 판매액(데이터처)
- ▶ 온라인·대형마트·SSM 주요 업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산업부)
  - 온라인 11사: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SSG,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마트, 롯데온
  - 대형마트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SSM 4사: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 전통시장: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 대형마트 주요 3사 점포수 및 매출액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점포수<br>(개)  | 395  | 409  | 410  | 408  | 406  | 394  | 384  | 379  | 375  | 368  | 362  |
| 폐점수<br>(개)  | 1    | 0    | 3    | 5    | 5    | 12   | 10   | 4    | 6    | 8    | 9    |
| 매출액<br>(조원) | 26.6 | 28.3 | 28.4 | 28.3 | 25.8 | 25.0 | 24.3 | 22.4 | 21.5 | 20.9 | 20.0 |